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말 탕감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탕감'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이며,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금전적 채무입니다. 정부에서 이자를 일부 보전하거나 보증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대출금 자체를 면제하거나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 상황에서는 일부 탕감 또는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나 자연재해 등 재난 피해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상환·감면 조치
- 폐업 후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장기 연체 시 금융기관 자체 손실 처리

>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정책적으로 결정된 예외적 상황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탕감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탕감보다 중요한 것: 성실 상환

정부정책자금은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소진공 대출의 경우 신용정보원과 연동되어 있어, 연체 시 불이익이 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아무리 좋은 정책자금이라도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은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인서 발급도 불가합니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 목록:

구분	제외 업종 예시
유흥·사행성	유흥주점, 노래방, 카지노, 성인오락실 등
투기·금융	대부업, 복권판매점, 금융·보험업, 주식·코인 투자 등
불법 및 유사 업종	불법 성인산업, 무등록 대부업, 불법 다단계

기타	골프장, 카지노, 퀵서비스 단순 중개업 등

예외적으로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대체로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방법은**?**

-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내 업종 확인 도구 활용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
- 상담센터**(1357)** 또는 지역 소진공 센터에서 전화 확인 가능

핵심 요약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 불가
- 특수한 상황에만 한정적 채무조정 가능
- 유흥·사행성·투기성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제외 여부 확인 가능
- 정책자금은 대출이므로 성실한 상환이 중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페이지로 돌아가기